

DECENT LEGAL UPDATE | JAPAN BUSINESS

일본 법인 실질소유자(UBO) 확인, 한국 주주가 알아야 할 기준

25%·50% 의결권 기준과 간접보유 판단,
정관 인증·UBO 리스트·법인계좌 개설 준비사항

2026. 09. 29. | DECENT 법률사무소

01 KEY ISSUE

일본 주식회사의 UBO는 의결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5%와 50%는 모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일본에서는 UBO를 실질적 지배자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등 자본다수결법인은 직접·간접 의결권 25% 초과 보유자를 확인하되, 50% 초과 보유자가 있으면 해당 의결권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

의결권 구조	기본적인 판단
A 60% · B 40%	A
A 50% · B 50%	A·B 모두 25% 초과 기준 검토
A 40% · B 30% · C 30%	A·B·C 모두 25% 초과 기준 검토
25% 초과 보유자 없음	출자·융자·거래 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 확인
그러한 사람도 없음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 확인

단순히 주주명부상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을 찾는 절차는 아닙니다. 의결권과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확인하며, 사업경영을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비상장회사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국가·상장회사 등 법령상 자연인으로 보는 대상과 관련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법무성 UBO 리스트 Q&A

02 KEY ISSUE

한국 모회사의 지배관계까지 연결해 확인합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단독 주주라고 해서 한국 법인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 관계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접보유 사례: 한국인 A가 모회사 의결권 60% 보유

단계	보유·지배 관계
한국인 A	한국 모회사 의결권 60% 보유
한국 모회사	일본 자회사 의결권 100% 보유
일본 자회사 UBO 검토	A의 한국 모회사 지배관계와 일본 자회사에 대한 간접 의결권 보유를 함께 확인

단순히 $60\% \times 100\%$ 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이 의결권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법인은 그 자연인의 지배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배법인이 대상 회사에 보유한 의결권을 간접보유 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일본 자회사의 주주명부뿐 아니라 한국 모회사의 주주·의결권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중간 지주회사가 있다면 각 법인의 의결권과 지배관계를 연결해 최종 지배자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법무성 UBO 리스트 Q&A

03 KEY ISSUE

법인 형태에 따라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주식회사	합동회사
주된 판단 기준	직접·간접 의결권 보유관계	수익·재산 분배권과 지배적 영향력 등
비율 기준	의결권 25% 초과 50% 초과 보유자 우선 검토	수익·재산의 25% 초과 분배권 등 50% 초과 분배권자 존재 등도 검토
정관 인증	설립 시 공증인 인증 필요	공증인 인증 불필요
법무국 UBO 리스트	의결권 기준 등 제도 요건 충족 시 이용	대상 아님
계좌 개설 시 UBO 확인	금융기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금융기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합동회사에 의결권 25%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본다수결법인이 아닌 법인은 수익·재산을 분배받을 권리와 출자·용자·거래 등을 통한 지배적 영향력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자가 없다면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는 정관 인증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 시 공증인의 정관 인증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자가 될 자'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법인계좌 개설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UBO와 지배구조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일본공증인연합회 정관 인증 안내 ·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04 KEY ISSUE

UBO 리스트와 은행 심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본 법무국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정보와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등기관의 인증문이 붙은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이용 법인	주식회사 및 특례유한회사. 합동회사는 대상 아님
리스트의 범위	의결권 50% 초과 보유자, 해당자가 없으면 25% 초과 보유자 등 제도상 대상에 해당해야 함
신청 방식	회사가 UBO 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작성·제출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21일부터 온라인 등기신청과 동시에 보관·사본 교부 신청 가능

모든 유형의 UBO를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UBO 확인에는 지배적 영향력이나 대표자 기준도 사용되지만, 법무국 리스트 제도의 대상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국이 회사의 UBO를 대신 찾아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리스트 발급이 계좌 개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UBO 자료 외에도 사업내용, 거래목적, 자금원천과 한국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 신청과 금융기관의 KYC·KYB 심사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UBO 리스트 제도 안내 · Q&A · 온라인 신청 안내

05 KEY ISSUE

한국 기업이 준비할 자료와 최종 점검사항

자료	확인 목적
일본 법인 주주명부·의결권 자료	직접보유 관계와 의결권 비율 확인
한국 모회사 주주·의결권 자료	모회사 지배자와 간접보유 관계 확인
전체 지배구조도	한국·일본 법인과 중간 지주회사 관계 연결
최종 지배자 신원확인자료	확인 대상자의 신원 입증
각 단계의 법인·지분관계 자료	구조도와 실제 보유관계의 일치 확인
사업·거래목적·자금원천 자료	금융기관 계좌 개설 심사에 대비

같은 지배구조를 절차마다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관 인증, UBO 리스트 신청 및 법인계좌 개설에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UBO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히 25% 보유만으로 해당 의결권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진출 전 법인 형태, 지분·의결권 구조와 UBO를 먼저 정리하고, 설립·계좌 개설 및 국내 해외투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일본 e-Gov |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일본공증인연합회 | 정관 인증 안내

일본 법무성 |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

일본 법무성 |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Q&A

일본 법무성 | 온라인 보관·사본 교부 신청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UBO 판단과 제출자료는 법인 형태, 지배구조 및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